

# 사람 잡는 새총, 규제 없어 '범죄 사각' 우려

### 무기류 신고 규정 없어... 온라인 성능 영상 수두룩 시민 불안감 커져... "인증 강화·주의사항 안내를"

광주 도심에서 새총을 이용한 상해 사건이 잇따르면서 모방범죄 가능성과 함께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광주 서구 쌍촌동 한 공원에서 새총을 쏜 시민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 A씨(56)가 검거됐다. A씨는 앞선 16일 오후 9시50분께 상일중학교 인근 공원에서 쇠

구슬을 발사해 20대 남성의 이마 등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공원 소음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후 도주했던 A씨는 경찰 추적 끝에 주가지 인근에서 붙잡혔으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와 별도로 새총을 이용한 재물손괴

사건도 발생했다. 광주 북부경찰은 지난해 12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같은 해 11월 북구 삼각동에서 쇠구슬을 발사해 교회 출입문과 아파트 유리창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터넷을 통해 새총을 구입했으며 "단순한 재미로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불법 무기 제조·소지 시 중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새총은 해당 법

주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신고나 등록 의무가 없다.

이로 인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적발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누구나 새총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구조가 단순해 제작 또한 어렵지 않다. 유튜브 등 SNS에는 레이저 조준기를 장착한 새총으로 물체를 관통하거나 사냥하는 영상도 확산되고 있다.

쌍촌동 주민 김모씨(40)는 "장난이라고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 사람의 눈, 급소

등에 맞으면 큰 부상으로 이어진다"며 "사고가 남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소식을 접하니 불안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새총을 법적으로 무기류에 포함하지는 쉽지 않지만, 구매 과정의 인증 강화와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병근 남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미성년자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인증 절차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위험성에 대한 교육과 주의사항 홍보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오늘의 날씨

예보 06:31 맑음 09:32 맑음  
해일 18:47 달림 --:--



광주	☀️	6~19
목포	☀️	7~18
여수	☀️	8~15
순천	☀️	6~16
구례	☀️	3~19
광주	☀️	6~17
신도	☀️	8~16
흑산도	☀️	7~14
진남	☀️	5~16
진도	☀️	6~16

목포	밀물(☀️)	05:54 / 17:49
	썰물(☀️)	10:54 / 23:01
여수	밀물(☀️)	00:23 / 12:18
	썰물(☀️)	06:19 / 18:29

## 수십억대 중고거래 사기 일당 무더기 실형

### 허위 물품 판매... 자금 세탁도

인터넷 중고거래 등을 빙자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거래를 편취하고, 가상자산 등을 이용해 자금을 세탁한 조직 일당에게 무더기 실형이 내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유형용 재판장은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34)와 B씨(33)에게 각각 징역 3년과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C씨(29)와 D씨(43)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3662만원의 추징이 명령됐다. E씨(28)에게는 징역 3년, F씨(42)에게는 징역 6개월이 판결됐다.

이들은 2023년 7월부터 텔레그램 등 인터넷 쇼핑북이나 중고거래에 허위 판매 글을 올린 뒤 불특정 다수의 금품을 가로채고, 자금세탁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른바 "오다 잠집 사기"로 불리는 조직형 범죄 집단으로 유인책과 계좌 제공자, 자금 세탁,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유인책들은 중고거래 카페 등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을 속였고, 피해금은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뒤 가상자산 거래를 거쳐 정상 거래인 것처럼 세탁했다. 이후 현금 또는 테더(USDT) 형태로 전환돼 총액 측에 전달됐다.

범행 규모도 상당했다.

A·B·C씨 등이 가담한 범행에서는 약 1295명으로부터 9억3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가 관여한 범행에서는 약 1493명으로부터 12억3000만원이 피해금으로 확인됐다.

E씨는 약 737명으로부터 6억2000만원을, F씨는 4명에게서 약 95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A씨와 C씨, D씨 등은 무신고로 가상자산 거래를 반복하며 수십억원 규모의 테더 코인을 매수·전송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한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온라인 거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다수 인원이 조직적으로 가담해 단기간에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킨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일부 피고인들이 기존 사건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나무 무료로 나눠드려요" 23일 광주 서구 벽진동 호남조경수 유통센터에서 열린 나무나눠주기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이 모목을 받아 가고 있다. 광주시는 시민들의 나무심기 참여를 확대하고 생활 속 녹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민 2000명에게 보리나무, 서향나무, 동백나무 등 3종을 각 1주씩(1인당 총 3주) 나눠줬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광주 시민단체, 강제동원 '3자 변제' 철회 촉구

### 법원 공탁 위법 사실 질타... 전면 재조사 등 요구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둘러싼 위법 의혹을 제기하며 정책 철회와 전면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3자 변제안은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국내 기업의 돈을 끌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주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 때 추진됐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23일 공동 성명을 통해, 2023년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한 제3자 변제 과정에서 위조 인감 사용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대신하기 위해 판결금 수령을 거부한 피해자 측 채권자 4명의 인감을 위조해 수십 차례 사용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최근 행정안전부와 외교부 감사 결과를 근거로, 법원 공탁 절차에서 위조 인감 제작과 무단 날인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력이 닿지 않은 피해자 7명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임의로 도장을 찍은 점에 대해 "국가가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공탁 절차를 주도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법원이 공

탁을 거부하자 법률대리인을 교체하는 과정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한 정황이 있으며, 정상외교 일정을 앞두고 공탁을 서둘렀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단체들은 "피해자 문제를 외교적 부담으로 간주해 성급히 처리하려 했다"며 "이는 사법부 판결 취지를 훼손하고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가로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3자 변제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 △외교부장관의 공식 사과 △제3자 변제안의 즉각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자체가 반헌법적"이라며 "피해자 동의 없는 배상 방식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수액결이' 노린 상습 절도범

만년범 ○·병원 입원환자의 수액결이에 걸려있던 소지품을 훔친 상습 절도범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재판장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5일 오전 0시 16분 광주 광산구 한 병원에서 피해자의 수액결이에 걸려있던 휴대전화와 케이스, 현금 17만원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

A씨는 피해자와 함께 대화하면서 이동하던 중 소지품 관리에 소홀한 틈을 이용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2023년 절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다른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뒤 누범 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과 제법의 위험성이 높다"면서 "피해자와 전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현금 절취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김민환 위원장 '물관리 전략' 주제 발표

## "영산강 수자원 자립 시급...통합 거버넌스 필요"

### 기름 장기화 속 다목적 수자원 체계 강조 농업용수 보장·SI 기반 관리체계 등 제안

일상화 된 기름 장기화와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4대호의 활용과 통합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민환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호남대 토목환경공학과 초빙교수)는 최근 영산강유역환경청 대강당에서 진행된 '영산강유역 물관리 전략'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수질 관리와 생태 보전,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022년 기상기름 발생량은 281.3일로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기간을 기록했다"며 "같은 해 주암댐·섬진강댐·평림댐·수어댐의 평균 최저 저수율은 24%로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고, 주암댐은 역대 최저치인 20.3%까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성호, 담양호, 광주호, 나주호 등 지역 핵심 수자원의 활용 효율이 낮은 상황에서, 해남에 국가 AI 컴퓨팅센터 건립이 확정됨에 따라 물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주암댐과 평림댐은 각각 보정감람과 수양제 연계운영이 필요하다. 섬진강 인근 농업용수 절감과 시민과

기업의 자발적 절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다목적 수자원 시스템 구축을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유역 내 농업용수를 거점화해 물 이용을 원활히 하고, 여유 수자원을 부족 지역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영산강 본류와 인근 댐을 연결하는 비상 공급망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북부·남부·중앙·본류 역류 등 4개 축으로 구성된 'Y자형 통합 간선망' 구축 방안이 제안됐다.

북부는 장성호와 담양댐을 연결해 광주 북부권 비상 급수원으로 활용하고, 남부는 광주호와 나주호를 연계해 광주 남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최근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세계 물의 날 기념식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구와 나주혁신도시에 용수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종합 축은 유역 전체 수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본류 역류 시스템은 송촌보와 죽한곡어촌공사는 농업용수 공급망 관리는 하천수 환류 체계를 고도화하는 내충을 받는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

이 같은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기관 간 역할 분담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수질 총량 관리, 한국수자원공사는 도수관로 건설·운영,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공급망 관리, 지방자치단체는 해수 재이용 시설 확충을 맡는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

이다. 또한 댐과 보의 수위를 분석해 기동 시 최적의 물 이동 경로를 도출하는 인공지능 기반 관리 시스템 도입과 함께, 농업용수와 생활·공업용수 간 가격 격차를 줄이기 위한 통합 물값 체계 마련도 제안됐다. 이와 함께 4대호 퇴적물 제거와 저수용량 확보를 위한 시설 보강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농민의 물 사용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농업기반 시설 현대화와 함께 물 배분 과정에 농민이 참여하는 상생 협의체 구성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영식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직무대리는 "물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안전적인 공급 체계 구축과 미래 수요 예측을 통해 지속 가능한 물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